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한반도 통일 - 플랜 A, 플랜 B
발제자: 현인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 시: 2017년 06월 29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제 261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한반도 통일은 구조적 요인과 촉발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가능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조적 요인은 북한 요인, 한국 요인, 국제적 요인으로 나뉜다. 북한 체제 쇠퇴의 정도와 북한 핵 개발 여부가 북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 체제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며, 핵 개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북한 요인은 성숙된 상태다. 통일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한국 요인이다. 국내 진보와 보수 세력의 이념 갈등이 종식되고, 북한 급변 사태 해결을 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후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요인은 미·중 경쟁구도다. 이 경쟁구도가 국제질서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탈냉전(Post-Cold War Era)시대와 같이 한 국가가 패권국이 되는 국제질서는 나타나기 힘들다. 그렇지만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므로 미·중 경쟁구도가 어떻게 변하는 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성숙되어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조적 요인이 갖추어질 수 있다.

■ 한반도 통일 플랜은 플랜 A와 플랜 B로 나뉜다. 플랜 A는 보다 점진적 변화를 거친 통일과정이다. 북한과 '대화과 협상'을 통한 단계적인 통합과정이다. 이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으로 확산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활발하게 비정치적·문화적으로 교류한다면 차후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경험과 관념이 북한으로 확산되어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근거한 단계적·점진적·평화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

■ 한국은 외교·안보 전략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는 동시에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일에 중점을 두지 않고 세부적인 현안에 집중하여 자연스럽게 통일을 이루는 바텀업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이 필요하다. 통일이 실현된 다음 북핵문제와 같은 개별사안이 해결되는 탑다운 접근방식(Top-Down Approach)은 비현실적이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 북한, 한국, 세계적 3대 요인이 동시에 성립되어야

- 한반도 통일은 세계사적 변환의 의미를 갖는다. 구조적 요인과 촉발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세계사적 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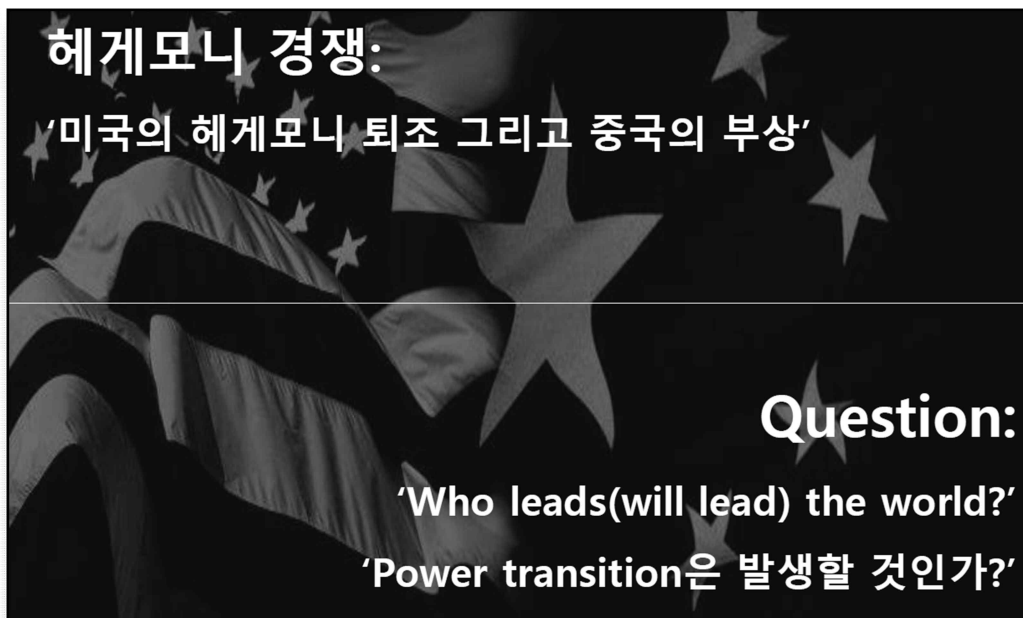


[그림 1] 세계사적 변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구조적 요인과 촉발요인이다. 바싹 마른 초가삼간(구조적 요인)에 성냥불(촉발 요인)을 붙여야 큰 불(세계사적 변환)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조적 요인은 북한 요인, 한국 요인, 국제적 요인으로 나뉘진다. 북한 체제 쇠퇴의 정도와 북한 핵 개발 여부가 북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 체제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며, 핵 개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북한 요인은 성숙된 상태다. 한국이 통일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한국 요인이다. 국내 진보와 보수 세력의 이념 갈등이 종식되고, 북한 급변 사태 해결을 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후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요인은 미·중 경쟁구도다. 이 경쟁구도가 국제질서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탈냉전(Post-Cold War Era)시대와 같이 한 국가가 패권국이 되는 국제질서는 나타나기 힘들다. 그렇지만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므로 미·중 경쟁구도가 어떻게 변하는 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성숙되어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조적 요인이 갖추어질 수 있다.

- 미·중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총 세 가지다. 우선 국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헤게모니(Hegemony) 전쟁 중이다. 미국의 반제국주의적 헤게모니(Anti-Imperialistic Hegemony)는 퇴보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세력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역전하려면 20~30년 이상이 소요된다. 미국과 중국의 변화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나 중국이 어떻게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가에 따라 한반도 통일이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수 있다.



[그림 2] 미·중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은 헤게모니 전쟁이다.

- 두 번째 요소는 미국주의(Americanism)의 대두다. 세계화(Globalization)를 제약하고, 적절한 책임·비용 분담을 통한 안보를 추구하고, 미국 희생을 통한 국제개입을 자제하는 것을 미국주의라 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주의와 세계통합주의(Globalism)가 격돌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군사적 세력을 강화하면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미국과 경쟁하고,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과 충돌하며,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불확실한 노선을 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의 대중정책이 결정된다.



[그림 3] 미국주의(Americanism) 혹은 트럼프 주의(Trumpism)는 세계통합주의(Globalism)와 대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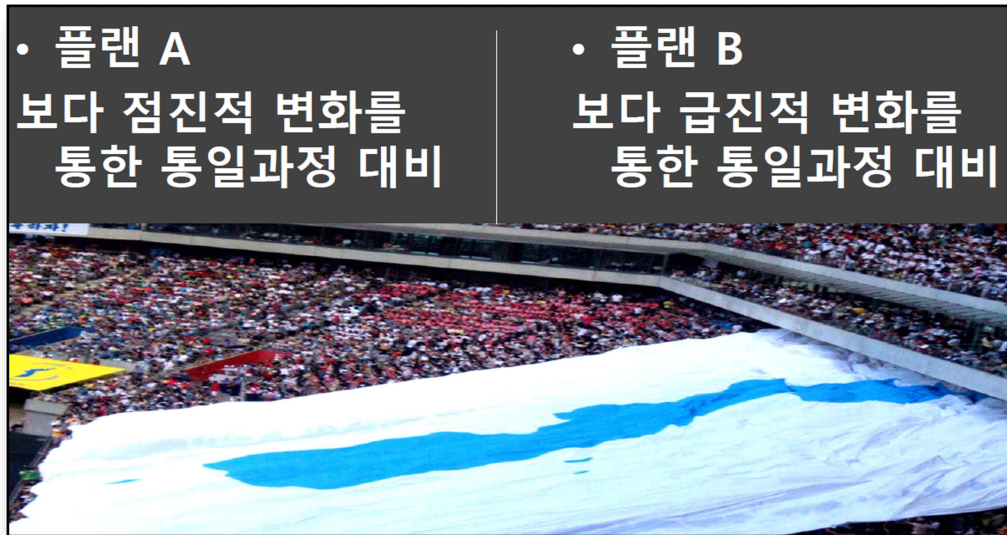
- 마지막 요소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다. 지난 6월, 3박5일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다. 대북 정책, 사드(Thaad) 문제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다시 한 번 한·미 관계의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특히 북핵 문제는 중국의 안보 딜레마(Dilemma)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중국은 명분이 부족하여 대북제재에 부분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북핵 제재 반대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사드를 통해 외교적·경제적 교류를 봉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미·중 갈등이 단기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북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낮다. 또한 한·중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국제적 요인을 살펴본다면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은 아직 부족하다.

■ 한반도 통일 플랜: 플랜 A와 플랜 B

: 장기적으로 플랜 A 추진, 북한 급변사태에는 플랜 B로 대비해야

- 한반도 통일 플랜은 플랜 A와 플랜 B로 나뉜다. 플랜 A는 보다 점진적 변화를 거친 통일과정을 대비한다. 북한과 ‘대화과 협상’을 통해 단계적인 통합과정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이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으로 확산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활발하게 비정치적·문화적으로 교류한다면 차후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경험과 관념이 북한으로 확산되어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

근방법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근거한 단계적·점진적·평화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있다.



[그림 4] 한반도 통일 플랜 A 와 B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플랜 A와 플랜 B는 필수불가결(Prerequisite Essential)한 관계다. 플랜 A를 진행한 다음 플랜 B를 추진해야 한다. 플랜 B는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라는 촉발 요인에 대비한다. 보다 급진적 변화를 통한 통일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총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제 1, 2 단계는 초기단계다. 제 1단계는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조치를 취하여 북한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이다. 제 2단계는 제 1단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다.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시에 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본과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하고 지지를 얻을 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제 3단계는 1~3년 내에 이루어야 하는 초기 안정화 노력이다. 비(非)군사화, 정치안정화와 경제·사회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비군사화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와 재래식 무기를 어떻게 폐기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당, 군, 내각 중 어느 선까지 통합의 대상이 되는가가 정치안정화 문제의 관건이다. 북한 급변사태의 성격과 이행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차후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 안정화의 주요 사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이기고 또한 북한이 얼마나 빨리 남한 수준의 주거, 토지, 직업, 교육,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느냐는 점이다.

■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

: Bottom-up 접근방식으로 세부적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

- 한국은 외교·안보 전략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는 동시에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일에 중점을 두지 않고 세부적인 현안에 집중하여 자연스럽게 통일을

이루는 바텀업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이 필요하다. 통일이 실현된 다음 북핵 문제와 같은 개별사안이 해결되는 탑다운 접근방식(Top-Down Approach)은 비현실적이다.

- 국제적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인위적으로 통일을 이루려 한다면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무리하게 핵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체제 쇠퇴를 자초하고 있다. 급변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원칙을 세운 다음 플랜 A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플랜 B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시급한 안보 현안에 유의하고 주변국을 설득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제 261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인 촉발요인은 무엇이 되겠는가?

답변 북한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다. 북한 주민이 장마당에서 시장경제를 터득해가면서 사회주의적 교육·행정이 갈 길을 잃었다.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시장경제가 확대된다면 북한 정권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만일 시장에 제재 압박을 가한다면 그 여파를 해결하는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질문2 현 시점에서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답변 북한은 최소 1~2년 내에 핵국가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미 핵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핵을 무기화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않고 있다.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든 협상이든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대화과 협상'이라는 과거 방식으로 통일은 이룬다는 것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돕겠다는 의지와 다를 바 없다.

질문3 탈북 학생들이 한국 초·중·고등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탈북 학생들을 도와야 하는가?

답변 탈북 학생만 따로 모아 교육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탈북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한국 학생들과 마주해야 한다.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보조 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탈북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한국 학생들과 어릴 적부터 교류할수록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고, 편견도 극복할 수 있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